

추장관 자녀 군복무 특혜의혹 난타전 與 “의혹 부풀리기” 野 “추장관, 사퇴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민주당 “코로나19 방역 집중해야 ‘아니면 말고’식 공방에 나라 시골”

국민의힘 “추장관 자녀 軍 복무시 통역병 선발, 휴가 등 특혜 해명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해 옹호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현안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 전쟁 중인데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군복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혜 휴가는 없다는 취지의)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하느냐”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이에 “당연히 신뢰한다. 추 장관 자체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으로 하는데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이 옳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국정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도 정 의원이 질의한 ‘추 장관 자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 “아들은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 제가 자식의 실력을 잘 안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라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야당이 추 장관이 자녀의 평창동계 올림픽 통역병 선발 당시 청탁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 아이를 먼저 알아보고, 정상적(선발) 방법을 바깥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것도 이번엔 알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자녀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보좌진을 통한 자녀 특혜 휴가 청탁 의혹’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제 자녀가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병무청에) 신고 안 했고, 군대도 잘 갔고 병가까지 잘 얻어서 치료 잘 받고 군 생활을 마쳐서 편법을 동원할 리 없다. 보좌진(을 통해) 국방부나 자녀가 복무한 군부대 등에) 전화 시킨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윤 의원 질의에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며 일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WTO 사무총장 출마 유명희, 美 방문

현지 정부·업계 등과 지지 협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15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 18일까지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에 나선다. 이번 미국 방문은 WTO 사무총장 선출 1라운드가 16일 종료되는 시점을 감안, 미국과 WTO 주요 이슈, 한미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 본부장은 WTO의 다자체제로의 전환에 자신이 책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본부장은 앞서 지난 1일~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에서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1차 라운드 기간(9.7~9.16)에 맞춰 제네바 주제 W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TO 회원국 대사 및 통상장관 등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164개 WTO 회원국이 후보자(8명) 대상 총 3라운드의 투표를 통해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를 배제한 뒤 단일 후보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hys@

“방역·경제 함께가는 길 찾아 국민 지켜야”

文 대통령, 수보회의 주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장기전
거리두기 완화, 자영업자 위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언급

하며 “경제 회복”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제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었다”며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수가 최근 100명 안팎으로 떨어진 상황에 대해 전한 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 “장시간 영업 중지 및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도 설명했다. 강화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생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무의미한 일 아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코로나19에 온라인 학습·근무
무선통신, 방역 필수재 역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해 잠겨 있다. /뉴스1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논란에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자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호승 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9300억원 규모로 통신비 지원 예산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학습, 근무

등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책이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라, 독감 예방접종에 지원하라’는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라며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장비가 필요하기에 그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감 예방접종 지원 요구를 두고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분인데, (추가 접종 분량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정치권에서 제기한 제안은) 어떤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되지만,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통신비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수석은 “지금 정부안이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며 통신비 지원 관련 논란이 커질 경우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영훈 기자

‘디지털드림9’ 스타트업 127곳 선정

중기벤처부, KT·필립스 등 참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밀고 당기며 협업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단 참여자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드림9’ 공모전 서면 평가에서 208개 신청기업 중 127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드림9’은 대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인공지능(AI) 콘텐츠,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그 해법을 내놓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이번 공모전에는 LG디스플레이, KT, LGU+, SK텔레콤, 필립스, 더본코리아, 롯데중앙연구소, 로레알, KBS 등이 참가해 6개 분야, 총 9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과제에는 ▲인

공지능(AI) 콘텐츠 ▲실감 미디어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푸드테크 ▲친환경 소재 분야 등이 포함됐다.

외식사업가백종원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제시한 ‘짬뽕맛 식별 센서’ 과제에는 시각, 후각, 촉각 등 감각 센서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또 실감미디어 분야 과제에는 야구공 궤적 정보를 제공해 현장감을 높이고, 이 데이터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 화질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승훈 기자 bada@